

한국사회복지학의 좌표

김 상 균(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주제의 함의

좌표라는 용어는 원래 수학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수학 외에도 위치라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지도에서 위도와 경도가 맞닿는 지점을 좌표라고 표현한다.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어떤 사물의 변화나 발전을 생각할 때에,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선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사회복지학의 좌표’라는 주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례 중 마지막 경우에 해당된다. 즉,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은 지난 60여 년 동안 얼마나 발전했는가? 또는 인접 사회과학의 다른 분과학문과 비교할 때 발전 정도가 어떤가? 사회복지학의 현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앞으로의 발전전망은 밝은가 아니면 어두운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일만한 논의를 해보라는 주문이다.

이와 같은 요구가 등장한 직접적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국내적 요인이며 다른 하나는 국외적 요인이다. 국내적 배경은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학에서 나타난 사회복지학과와 양적 팽창 현상과 현재 거세게 불고 있는 대학의 구조조정 요구와 연관된다. 외형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학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고, 신입생들의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인기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졸업생의 사회진로 선택 시 전공 살리기의 비율이 높지 않거나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특히 대학의 변혁은 교수들로 하여금 미래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으로 대학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사회복지학과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학과선택에서 나타난 최근의 인기가 혹시 거품은 아닌지? 사회복지사가 유망직종이라고들 떠들썩하지만, 사회적 대우는 오히려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불안감은 갑작스레 인기가 높아진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학과와 인기상승으로 인해 「유사 사회복지학과」 혹은 「유사 교과목」 명칭의 발명과 교과서 표절 현상이 빈발함으로써 우리는 지적 영토권 분쟁을 대비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

국외적 배경은 1980년대 이후 서양에서 나타난 「합리성의 위기」 즉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서양 사회복지학의 속수무책과 관련된다. 우리는 처음부터 서양 사회복지학을 진리인양 철석같이 믿었다. 그래서 그것의 이론과 실천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고 따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한

신념은 복지국가 전성기만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였고 따라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복지 문제는 우리가 서구화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정은 변하고 말았다. 자본의 세계화에 복지의 세계화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제도적 지체(institutional lag)」 현상은 잘 나가던 서구 사회복지학의 미래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돌이켜 보면, 복지국가 출범기에 당당하게 주창되었던 핵심 원리들은 합리성과 완벽하게 조화될 수 있었다. 일례로, 중산층 이론(the theory of middle-class) 즉, 중산층을 두텁게 육성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패턴을 사회에 널리 전파시키면, 빈곤층이나 문제 가정의 위험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없었다. 더욱이 그와 같은 기능을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겸비한 소셜워커들에게 맡기면 된다는 부분에 이르면 문제 해결의 합리성이 완벽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소셜워커가 최고 조로 발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조차,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통제 기능을 맡은 소셜워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였다. 또 다른 예로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소득 불안이라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이성이 발동되는 진화의 한 형태이며, 그것은 사회보험의 원리를 통해 구현되는 합리성의 완성품이었다. 그래서 사회보험 속에는 소득 재분배의 기제가 내장될 수 있었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확정급여(defined benefits) 방식이 채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에서 조차 연금개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과거의 해결사였던 사회보험이 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그리하여 사회보험의 우월적 위치는 표적화(targeting)라는 가면을 쓴 사회부조에 밀려나기 시작했고, 확정급여는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s)에 치이고 있다. 문제는 사회복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서양인들이 그토록 선전하던 이성과 합리 그리고 진보의 개념이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희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면 속에서, 지난 60년간 우리들을 끈질기게 괴롭혀온 한국사회복지학의 정체성(identity) 문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야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면서 당연하다. 이제 서양에서조차 국가복지 - 그것은 합리성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 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대안이라는 것이 겨우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또는 복지배합(welfare mix)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사회복지 합리성의 복원을 위해 그들에게 일조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서구사회에서조차 소셜워커의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의 인정도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다면, 이 문제 역시 세계적 차원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선시키도록 할 책임을 져야 한다.

방금 언급한 국외적 배경은 오늘의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자들로 하여금 전대미문의 도전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긴 세월동안 서양에 의존한 결과 우리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적 의존문화」에 저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독립이 의존보다 바람직하다고 쉽게 동의하지만, 막상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단계에 이르는 순간, 그것은 불안으로 다가오게 된다. 정체성 확립의 당위성과 그것의 실천성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서 불안과 고통은 불가피하게 동반된다. 누가 그러한 불안과 고통을 감수하겠는가? 이에 대한 해답의 제공이 우리의 진짜 고민이다.

이 글은 오늘의 한국 사회복지학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고민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서 출발한다.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역시 좌표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맨 먼저 한국사회복지학의 현재에 이르는 역사를 고찰한다. 이어서 한국사회복지학의 특성을 정리한다. 그

다음으로 한국사회복지학의 미래를 전망한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 끝으로 그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제안한다.

2. 한국사회복지학의 전개 역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학은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창설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는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한 후에 사회복지학이 등장했던 영국이나 미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다시 말해, 사회의 필요보다 대학의 필요에 의해 학과가 설치되던 과거 전통과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 대학이 직업선택과 무관하게 졸업장을 획득하는 하나의 관문 기능을 하던 시대에는 사회적 필요성은 그렇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정은 달라지고 있다. 직업전선과 연계되지 않는 응용부문 학과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이다.

한국동란 이후 대학에서의 사회복지학 교육은 미국의 원조프로그램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 1986:100-101). 그 프로그램에 따라 1955년에, 한국인 3명이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소셜워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분들은 석사 학위를 받고 2년 후에 귀국하였다. 이어서 1959년 서울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창설되었고 그분들은 교수 또는 강사로 활약하였다.

이와 같은 초기 한국사회복지학의 역사적 특수성을 이해경은 세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이해경, 1996: 43~44). 첫째, 사회복지학의 연구대상인 사회복지제나 소셜워 실천의 현상이 형성되기 전에 학문으로서 먼저 소개되었다. 둘째, 영국형 사회정책학보다 전문직업인 양성의 미국형 소셜워 교육이 소개되었다. 셋째, 선진국에서는 학문의 본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표 대학교(예컨대, Oxbridge, Harvard and Yale, Paris, Tokyo 대학교 등)에 사회복지학과가 없지만, 우리의 경우 서울대학교에 설치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역사에서 1979년은 의미심장한 해이었다. 서울대학교의 사회사업학과가 사회복지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국내 최초의 박사과정을 동 대학원에 신설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계기로 사회정책학 교육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교과과정의 내용이 기존의 소셜워학 중심에서 벗어나 소셜워학과 사회정책학을 조화시키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통해 최고급의 학문 후속 세대를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의 우리나라 사회과학계에는 한국자본주의의 객관적 조건을 탐구하려는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적 패러다임이 유행했다. 사회복지학도들이 그러한 대열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복지학으로의 전공영역 확장에 힘입은 바 크다.

대학에서 일어난 사회복지학과 양적 팽창은 198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사회복지학을 교육하고 있는 대학교들의 연합체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자료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4년 현재, 전체 회원교의 수가 59개인데, 그 중 81%인 48개 학교가 1980년대 이후에 창설된 것이다(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4:226). 학과 수의 확대에 이어 전공교수의 증가가 동반되었음은 물론 각종 사회복지 관련 분과학회의 양적, 질적 발전도 두드러졌다. 이러한 발전의 주된 원인은 경제성장에 따르는 사회문제의 발생과 그것에 수반되는 사회입법의 제정 및 시행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87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채용이다. 사회복지전

문요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한다, 그런데, 당시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1급 자격증을 받았다(2003년부터 국가고시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졸업 후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1급 자격증을 받게 됨). 바로 그러한 이점이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사회복지학과와 신설됨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상의 역사를 요약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던 사회사업학이 구라파의 사회정책학을 첨가하여 사회복지학이란 명칭으로 신장개업을 한 셈이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이해경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일 뿐 아니라 학문적 성취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복지학의 정체성(identity) 확립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가 지적한 정체성의 네 가지 쟁점은 ① 관련학문이나 타학문으로부터의 상대적 독립성 이슈, ②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내적 체계성과 일치성의 이슈, ③ 응용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의 과학성과 실천성의 이슈, ④ 문화적 토착성의 이슈 등이다(이혜경, 1996: 47~48). 심사숙고하면, 네 가지 이슈 중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나라 사회복지학도들에게 ②와 ④가 더욱더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②와 ④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고 ①과 ③을 먼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사회복지학의 연구수준은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을 반영하듯, 아직도 이론적 수준에서나 실천적 수준에서 부족한 것이 많다. 그리하여 서구에서 제기되었던 이론적 논의에 대한 이해와 적용, 그리고 서구 편향적인 경험적 사실을 소개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 사회복지학도들이 서구의 이론적 논의와 선진복지국가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집중한 결과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개별 연구자의 학문적 지향과 연구배경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사회복지현실의 낙후성에 따른 이론과 실천의 괴리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활동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계 연구자들을 시대별, 연구내용 및 업적별로 구분해보면, 대략 3세대로 나누어진다. 제1 세대는 1950년대에 연구 활동을 시작한 분들인데, 미국의 소셜웍학을 우리나라에 전파 또는 이식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그 분들 중 선도적 역할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중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후 1950년대와 60년대에 미국 소셜웍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분들이 많고 있었다. 초창기적 특성 때문에, 제1 세대는 연구보다 교육에 치중하였던 반면, 연구 업적이나 저술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면을 보였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생 학문의 초석 다지기과 정치 작업에 대한 그 분들의 공헌은 높이 평가된다.

제2 세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당시의 국민학교 교육을 받은 분들이다. 그들은 국내 대학 학사 과정에 입학하여 제1 세대들로부터 소셜웍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런 분들 중 일부는 미국을 위시한 서양으로 유학하였다. 그 곳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략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반에 귀국하여 교수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박사 학위 경험을 우리나라 소셜웍학 교육에 연결시킴으로써 학문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 경험을 활용하여 당시의 소셜웍학 중심 교육 내용에 큰 변화를 촉발시켰다. 즉,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당시로는 생소했던 사회정책학을 사회사업학 교육과 연구 내용에 추가함으로써 오늘날의 사회복지학을 창조해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이 신설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은 대학 내에서의 연구 활동 뿐 아니라 여러 국책 연구소나 민간 연구소와 연계한 연구에도 참여했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출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회복지 관련 학회지가 정기적으로 출판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제3 세대는 1980년대에 대학의 학사 과정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제2 세대들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다.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받아 그들은 전 세대와 달리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서구 편향적 사회과학에 대하여 심한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보다 토착적이고 학문적 체계성을 갖춘 '한국적 사회복지학'의 정립에 대한 열정을 지녔다. 그들 중 일부는 외국으로 유학했고, 그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귀국하여 학문을 계속하였다. 제3 세대가 제2 세대와 차이 나는 점은 연구 결과의 양적, 질적 수준의 발전 측면이다. 우선 배출된 연구자의 숫자가 현저히 늘어났다.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학문의 현장도 국외까지 확산되어 외국의 유명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거기에서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 논문, 저서 그리고 각종 연구소에서 출판되는 연구 결과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런가 하면, 이들 중 일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에 자신들의 연구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제1세대로부터 3세대에 이르는 사회복지 연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이제 한국 사회복지학은 기본 구조를 완성하였다. 학부 교육의 기본이 되는 기초교육과 전공교육의 체계가 완성되었고, 거의 100%의 교재가 우리 학자들이 한글로 저술한 것들로 충당되고 있다. 거기에서 「한국 사회복지학」이 대표하는 학술지가 년 4회 정기적으로 출판되고 있으며, 년 2회에 걸쳐 열리고 있는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에는 어느 학회의 참석자 수를 능가할 정도이다. 전국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숫자가 늘어났고 따라서 교수숫자도 증가하여 인접 분과학문에 비해 손색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신생 학문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커져버렸다. 실천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출신자들의 숫자가 줄잡아 2만 명은 훨씬 더 된다고 보면, 전문적 치고는 많은 편이다. 그리고 각종 연구소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회복지학자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3. 한국사회복지학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의 특성 중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분과학문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학 역시 서양식 학문을 모방하고 추종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사회복지학의 연구경향은 그동안 꾸준히 거론되어 온 국내 사회과학의 토착화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서구사회를 바탕으로 했던 이론적 지향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논의들이 다수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복지학의 탐색작업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다시 말해,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사회복지발전에 미친 영향이나 사회복지학의 내용과 전개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사회복지학도에게 부여된 학문적 과제가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두 번째 특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는 소셜웬학(미시복지학)과 사회정책학(거시복지학)을 묶어서 이론 및 실천 개념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려는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소셜웬과 사회행정(social administration)의 교육을 따로 구분하는 한편 사회행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의 전통을 계승한 소셜웬 교육이 사회복지학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소셜웬기양성은 전문대학이 맡고 있으며, 사회정책학은 4년제 대학의 사회학부나 경제학부가 맡는 등 2원화되어 있다. 영·미 국가에서 소셜웬학과 사회정책학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오히려 최근의 일이다.

4. 한국사회복지학의 전망

이제, 한국사회복지학의 미래 전망을 점쳐보도록 한다. 먼저 소셜워커의 전문성에 대한 공방이 점차 열기를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소셜워커의 전문성 논의는 장기간 소셜워커들만의 잔치였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가운데, 소셜워커들끼리 모여서 전문성도 논의하고 자격증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8년부터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위한 국가고시제도가 2003년부터 도입된다는 사실이 그 해에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생활과학대학(구 가정대학), 행정대학 등의 인접 전공 학과들이 쟁쟁하게 그들의 교과목이나 개설과정 이름에서 '복지'라는 단어를 폭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복지 관련 업종의 직업 전망이 밝았던 모양이다. 더욱이 사회복지학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복지 관련 전문직의 영역 경쟁에서도 기존의 사회복지학과 충분히 겨뤄볼만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2004년에는 여성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 관련 업무를 넘겨받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 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정봉사원'이라는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족복지사와 같은 새로운 자격증을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는 구별되는 가족복지사의 배타적 실천현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가시화되었다. 바야흐로 소셜워커에 대한 도전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은 소셜워커의 질적 향상 요구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소셜워커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인접 분과학문의 결눈질 공세는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자신들의 전문성과 전문영역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전적으로 사회복지학회 회원과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완성된 답은 이 글의 주제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학회회원들인 연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풀어야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정책학의 연구 역시 사회복지학은 물론 행정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등의 여러 분과학문들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정책학 전공 연구자들의 노력은 제도론 중심의 기존 우리의 강점을 지속시키는 가운데, 분석기법 등의 활용을 통한 내연의 충실에 집중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 사회복지학의 미래는 사회복지학회 회원들 간의 협력관계가 얼마나 개방되고 원활한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복지학은 소셜워커학과 사회정책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학회는 소셜워커학과 사회정책학 전공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기우가 되길 바라지만, 혹시나 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한국사회복지학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당신은 무슨 똥판지같은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가?" 하면서 냉소를 짓고 있는 사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상당기간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나 전문가 양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와 교육이 현존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낙관적이고 안이한 전망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미 가시화되고 있듯이 과거의 학문 영역구분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대신에 동일 주제를 놓고 여러 분과학문들이 공개

경쟁을 벌이거나 두 개 이상의 전공영역이 fusion화해서 새로운 영역(협동과정이 좋은 예가 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더욱이 응용학문에서는 ‘평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욕구라는 평을 잡는 사회복지학이라는 매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은 더 이상 안 통한다. 사회복지학 평보다 더 날쌌던 평이 등장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학문세계의 경쟁은 세계화의 대세가 되었다. 여기에서 날쌔기 경쟁을 회피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다. 어느 평이 더 날쌔기를 평가하는 것은 사회적 평판 즉 불특정 다수인 사회구성원들의 몫이다. 우리 연구자들은 그들 앞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의 매가 최고의 송골매라는 사실을 입증할 따름이다.

5. 한국사회복지학의 연구과제

지금부터는 한국사회복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연구 과제를 도출해본다. 방법은 방금 고찰한 한국사회복지학의 전망과 그 앞에서 정리한 한국사회복지학의 두 가지 특성을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것이다. 연구과제는 두 가지 특성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사회복지학의 토착화 과제가 첫 번째이고 미시 및 거시복지학을 통합시키는 과제가 두 번째이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한국사회복지학의 토착화 과제 또는 정체성 확립의 과제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사회복지학의 발전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를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해결된다. 이제 사회복지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두 가지의 사회구조적 측면과 네 가지의 이념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특징은 비공식적(informal) 지원체계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개인은 자신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 삶의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력 손상 시 개인의 인간적 생존은 곧바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국가복지(state welfare)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서구사회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국가의 노력은 미약하다. 이유 중 하나는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주요한 원조 기제(mechanism)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널은 노동부의 공식 채널이 아니다. 그것은 친구나 선배, 친인척, 지인 등의 비공식 채널이다. 비공식 지원체계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다(손병돈, 1998; 홍경준, 1999:9장). 그러나 사회복지 연구에 있어, 비공식적 지원체계를 하나의 주요 변수로 설정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히 확보된다.

둘째,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는 기업이나 가족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부족한 부분을 기업이나 가족이 떠맡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국가가 경제성장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짊어진 결과이다. 그리하여 복지부분에 대한 투자가 장기간 연기되어 왔으며, 자본주의 원리에서의 합리성 결여를 초래하였다. 서구의 경우, 산업화에 부수된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비용으로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국가부분보다는 오히려 기업 등에 의한 사회적 책임이 비대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준조세의 형태를 띠는 대자본 집단의 사회복지활동이 확대일로에 있으며, 재벌이 복지재단 및 각종 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홍경준,

1999:5장,8장). 국가 책임이 기업으로 전가된 결과,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비중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국가복지부문의 축소와 기업복지부문의 이상적 비대 현상의 저변에는 장기간의 '선성장 후분배'라는 국가발전 전략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자계급의 복지 요구가 조직적으로 제기되지 못한 측면도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은 고전적 서구 자본주의가 밟았던 발전의 길과는 다르게 국가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사회가 형성되거나 제급의식이 싹트는 것이 사회구조의 변동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가권력에 의해 조장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권력과 독점자본간의 유착구조와 자본축적 과정의 파행적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구조적 측면에 이어, 다음으로 이념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복지발달의 특수성을 살펴본다. 첫째,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집요한 가족 이데올로기 또는 가족주의(familism)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가족구조가 크게 변화한 결과, 현재는 핵가족이 대종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유교문화에 근거한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는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가족간의 강한 결속의식과 가족책임 및 부양 이데올로기가 생생하게 살아 있다(홍경준, 1999:4장). 이와 같은 현상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사뭇 다르다. 이상의 특성을 사회복지 차원에 연결시켜 보면, 가족을 단위로 하지 않고 전체 사회를 단위로 하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실현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책임을 가족 또는 개인에게 전가하더라도, 사회적 저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이혜경, 1990: 86). 따라서 가족의 세력이나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우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능력이 개인의 능력과 동일시되는 모순을 노정하게 된다.

둘째, 비공식 문화가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비공식적 지원체계는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 혹은 소규모 공동체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예컨대 가족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가족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을 금기시한다. 그 결과 개인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사회정책적 접근이나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려는 소셜웍 활동이 방해를 받게 된다. 그리고 국가복지의 발전가능성도 제약받게 된다. 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정책지향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 복지국가들은 일찍부터 실업문제를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그리하여 한 때는 완전고용정책을 채택하였으며, 현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광범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실업이 국가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은 약하다. 오히려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완전고용정책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된 적이 없다. 심지어 건국 후 처음 맞는 '98년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한 정부 정책도 공공근로사업(public works) 수준을 넘지 못했다(Lodemel & Dahl, 2001:10장).

셋째로, 국가복지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적 욕구의 해결이라는 정당성 논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특징인 국가주도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사회복지의 가장 보편적인 동기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다. 그러나 장기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다. 사회적 욕구 충족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배려와 같은 동기가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의료보험제도가 1977년부터 시행된 배경에는, 경제성장의 이득을 사회적으로 환원하지 않고는 지속적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먹혀들었다는 것이다(전남진, 1987:461). 우리나라 최초의 보편적 연금제도 입법

화에도 역시 경제적 동기가 작용했다. 당시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이었던 중화학공업 육성에 소용될 막대한 자금을 국내에서 동원하려는 의도가 바로 그것이었다(전남진, 1987:436). 그런가 하면, 정치적 배려도 강한 동기로 작용했다. 손준규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배경을 사회적 불안에서 야기된 안보 불안과 집권층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서 찾고 있다(손준규, 1983:140-142). 이영환은 1989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영구임대주택 제도의 실시 배경에는 '대통령 중간평가' 공약의 실천 압력과 민주화 압력을 완화시키려는 정치적 배려가 숨어 있었다고 주장한다(이영환, 1995:158-159).

넷째로, 복지제도 발전단계의 축약 내지 비약이 의도적으로 시도된다는 특징이 있다. 제습(Jessop)의 논의에 의거해 보면(Jessop, 1993),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경로는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축적체제에 대응한 케인즈주의(Keynesian) 복지국가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차별적 소비라는 축적체제에 대응하는 슈페터리언(Schumpeterian) 복지국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국가복지는 그러한 이행과정을 밟지 않고 있다. 케인즈주의식 복지국가가 정착되기도 전에, 슈페터리언 복지국가의 특성이 나타나서 양자가 혼재하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제도가 비기여(non-contributory)연금의 제공 없이, 곧바로 기여방식으로 출발한 것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극히 예외적인 형태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성숙되기도 전에 민영화(privatization)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서구 나라들과 다른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절반이 보편적 노령연금제도로부터 제외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식 재원조달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한국 자본주의 이행과정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첫 번째 과제인 한국사회복지학의 토착화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우리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알아보았다. 이어서 두 번째 연구과제인 미시복지학과 거시복지학의 통합성 내지 연계성의 확립에 관해 알아본다. 양자를 통합하거나 연계시키려고 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셜월학과 사회정책학의 이론체계와 연구방법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패러다임의 통합은 아직 요원하다. 이제 겨우 소셜월의 통합적 접근론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 소셜월학과 사회정책학의 전공자들 사이에 패러다임의 통합을 둘러싼 합동 연구와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제 앞서 논의한 두 가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 차원의 연구 과제를 도출해본다. 한국 사회복지의 특성을 미시 복지수준에서 보면 소셜월 실천의 비전문성으로 요약된다. 이를 거시 복지수준과 연결하면, 국가복지의 저발전성이란 답이 나온다. 비전문성과 저발전성은 일차적으로 한국 사회복지학을 정립하기 위한 핵심주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현상의 원인을 발견하거나 해명하는 작업은 우리 사회의 현실적 특성을 바탕으로 할 때,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심주제를 규명하기 위한 주요 연구과제와 연구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시사복지학의 최근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서구 이론의 소개와 더불어, 이들 이론의 소셜월 실천 적용에 관련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끔씩 참여관찰을 통해 서양 이론에 대한 확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학문적 논의가 현실 실천분야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자체반성의 결과와 연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토양에서 미시복지학의 주요내용이 어느 정도 적용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소셜웍 실천의 비전문성을 규명하는 노력과도 연결된다(홍선미, 2004).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소셜웍 실천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즉 이론의 부적절성인가 아니면 이론 적용에서의 문화적 특수성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둘째, 미국학자들을 중심으로 개발된 소셜웍 실천이론이 한국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현실적합성을 갖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 셋째, 개별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의 욕구에 대해 개인별 충족방식의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해명해야 한다.

거시복지학의 경우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보편적 이론 논의의 소개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의 우리나라 현상이 갖는 독특성을 해명하려는 노력이 점차 증대하고, 새로운 접근방법도 제기되고 있다(김태성, 성경룡, 2000:16장). 거시복지학에서 우리나라 국가복지의 저발전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과제로는 첫째, 저발전성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이러한 과제는 선진국 또는 제3세계 국가와의 비교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국가복지가 저발전하게 된 맥락을 사회경제적 구조 또는 정치적 구조의 특성과 관련하여 고찰해야 한다. 셋째, 국가복지의 저발전성으로 인한 사회구성원의 복지요구에 대한 적응양태를 규명해야 한다. 즉 사회 속에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활동의 존재형태에 대한 규명이다.

6. 과제 수행을 위한 전략

앞서 제기한 연구 과제들의 목표를 요약하면, 우리는 한국사회복지학의 내연을 충실하게 하면서 동시에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이중목표가 도출된다. 내연적 충실을 다시 사회복지학의 2대 지주로 분류하여 고찰하면 미시복지학과 거시복지학의 전략으로 이어진다. 전략은 편의상 각각 한 가지씩만 제시한다.

먼저 미시복지학의 경우 실습교육의 강화가 우선순위 1위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은 미국으로부터 직수입한 소셜웍학의 모방 교육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셜웍은 미국과는 판이한 생성배경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소셜웍은 자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소셜웍의 사회적 필요성도 산업화와는 무관한 식민지 전쟁과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이 촉발한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통제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약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셜웍의 전문성 논의는 미국의 논의 역사(김상균 외, 2005:423-425)와 전혀 다름을 의미한다.

한국 소셜웍의 전문성 논의에 있어, 특이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찍부터 전문가 조직을 결성하고 자격증제도도 시행했지만, 소셜웍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전문가 대접이 아니었다. 둘째, 여타 전문직이나 인접 직업이 소셜웍의 전문성에 대해 가시적 도전장을 던져본 예가 없다. 셋째, 정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국가고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소셜웍에 대한 독점적 권한 부여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성을 생명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교육에 있어 교육성이나 효과는 실습교육의 양과 질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이 사회복지 현장을 선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다른 학과에서 사회복지(또는 유사 사회복지) 실습교육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시킨다면, 일대일 경쟁에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은 소셜웍 교과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이나 행정과 같은 거시와 중시 접근은 물론, 조사와 같은 간접 실천방법 과목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

의 경우, 최소한 학부에서 400시간 이상, 대학원에서 900시간 이상의 실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문교육에서 실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김용일 외, 2003).

우리의 경우, 실습 교육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습담당 교수 및 슈퍼바이저 부족, 사회복지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 실습지 부족 등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장애물은 실습교육을 개별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개인주의적이고 단시안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물에 불과하다. 일정 시점에서 자원이 한정되면, 그것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면 된다. 예컨대, 일정 지역 내의 대학들이 그 지역 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과 연합하여 일종의 다목적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의 하부체계로서 실습교육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 줄여서 CH)를 운영할 수 있다.

실습 CH는 해당 지역 대학과 실습기관의 협의체로서 실습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목적을 갖고 운영되기 때문에, 개별 학교의 이해관계에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대학에 소속한 실습 교수라 할지라도 실습CH 회원 자격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실습CH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실습CH는 회원 학교로부터 실습교육에 관련된 주요 사항의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게 된다. 예를 들면, 최소 실습시간 확정(예컨대, 필수 300시간; 선택 100시간), 개별 학생의 실습지 배치, 슈퍼바이저 선정, 산학협동 프로젝트 운영 그리고 실습교육 발전기금(가칭) 관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실습교육 발전기금의 마련과 운영은 실습CH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소셜웍 전문성 제고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거시복지학의 발전을 위한 시급한 전략 한 가지를 들라면, 사회정책학에다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사회정책학의 응용성측면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와 연계되어 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학도들은 제도론 중심의 연구와 학습에 정진한 결과, 제도분석에서 요구되는 효과성 측정이나 재정 추계와 같은 개량적 분석에 관한 지식과 기술은 주로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공자에게 의존해왔다. 예를 들면,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을 논함에 있어 지금까지 우리의 실정은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학도가 주로 제도적 측면을 맡는 반면, 재정 측면이나 효과 분석 등의 측면은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의 몫이었다. 이러한 이원체제의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약점은 제도 개선의 목적과 수단동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원래 사회정책은 실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도가 그것의 수단인 재정이나 행정과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사불란한 사회정책의 개발은 그것의 주관자들이 일관된 작업과정을 시종일관 관여할 때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정책학과 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접목 작업 역시 간단하거나 단시간에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개별 학교가 시도하기에는 부담이 과중하다. 이 문제 역시 앞서 실습CH와 유사하게 여러 개의 대학이 공동으로 해결해보는 방법이 있다. 다행히도,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의 방법 중에는 교수의 지위를 다양하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들어있다. 경제학자를 겸임교수로 임명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 한 명의 교수가 여러 개 대학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는 연합임용(joint appointment) 제도는 또 다른 예이다. 거시복지학에서도 만약 일정 지역 내의 몇 개 대학이 합동으로 경제학이나 경영학 교수들을 pooling하여 활용하면, 개별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단 해당 경제학자나 경영학자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는 물론 교수 pool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학 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더욱이 이제는 단기 임용교수제도도 활용 가능

하기 때문에, 여러 대학이 일정액의 '연합임용제 기금(가칭)'을 마련해서 그 기금의 한도에 맞게 계약제 교수를 채용할 수도 있다.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전략 즉, 실습교육 강화전략과 정책분석 강화전략은 한국 사회복지학의 내연적 충실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제 남은 한 가지인 외연적 확대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연적 확대의 필요성은 내연적 전략만으로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는 데 부족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분과학문이 학문의 계보로서 자리 잡으려면 한 나라 내에서 인정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외에서도 인정되어야 하고 동종학문 간의 국제간 교류도 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방면에서 세계화가 급속하게 형성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학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외연적 확대 전략은 미시 및 거시 복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전략이다.

한국 사회복지학의 외연확충 전략 제1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영어로 출판되는 학회 학술지의 정기적 발간이다. 현재 우리 학회는 년 4회에 걸쳐 정기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지만, 모두가 한글로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학의 세계화에 대한 기여도는 별로 높지 않다. 놀랍게도 한국사회복지학의 연구물에 대한 국외의 요구나 관심이 증가일로에 있다. 이런 현상은 앞서 언급한 서양 합리성의 위기에 주로 기인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사회복지제도 중에는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독특해서 그들이 참고할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서 그럴 수 없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그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영문 출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력이 국문 출판에 비해 몇 배 더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문출판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자에 대한 학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번역 또는 초고에 대한 편집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려면, 먼저 '영문 학술지 지원 기금(가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 학회는 얼마간의 기금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의 일부를 우선 사용하면 당장의 출발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학회 내에 영문 학술지 발간을 전담하는 기구(가칭 영문편집분과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기구가 모든 관련 사항들을 처리하도록 하되, 초창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발간하도록 한다. 그리고 수록되는 원고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상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한국사회복지학의 미래발전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전략의 제시를 목적삼아 출발했다. 이러한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고대 중국 춘추시대의 역사 해설서인 左氏春秋傳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문귀를 한 번쯤 되새겨볼 것을 권한다. 居安思危, 思則有備, 有備無患(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면 대비를 하게 되고, 대비를 하면 걱정거리가 안 생긴다)

참고문헌

- 김상균 외(2005) 《사회복지개론》, 개정판, 나남
 김용일 외(2003) 《사회복지수퍼비전론》, 양서원
 김태성·성경륜(2000), 《복지국가론》, 개정판, 나남출판
 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1986), 《서울대학교 40년사》
 손병돈(1998), “가족간 소득이전의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손준규(1983), 《사회보장·사회개발론》, 집문당
- 이영환(1995), “영구임대주택의 정책결정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혜경(1996), “한국사회복지학의 정체성,” 《연세사회복지연구》, Vol.3
- 전남진(1987), 《사회정책학 강론》, 서울대출판부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2004), 《2004년도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
- 홍경준(1999), 《한국의 사회복지체계 연구》, 나남출판
- 홍선미(2004),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기반과 학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권, 4호
- Jessop, B.(1993), "Towards a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Preliminary Remarks in Post-Fordist Political Economy,"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40
- Lodemel, I. & Dahl. E.(2001), "Public Works Programmes in Korea," in Park, F. & Park, Y.(eds.), Labor Market Reform in Korea, Korea Labor Institute and the World Bank